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이 대통령, 9일 지역 국회의원·시도지사 등과 오찬 특별법·통합단체장 논의…속도·시기 놓고 시험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특별법 제정과 통합단체장 조기 선출 구상까지 거론되며 정치권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과 직접 마주하는 자리가 이번 주 예정돼 있어, 통합 추진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논의가 중대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도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행정통합 구상이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어떤 정치적 무게를 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2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구상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직후 두 단체장은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 대통령을 만났으나, 공식 행사 성격상 구체적인

논의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념촬영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시장에게 “(행정통합을) 하기로 했다면서요”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김 지사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 대통령 인식이 통합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해졌다. 이후 대통령실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 일정을 공식화하며 논의의 무대를 넓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번 광주·전남 간담회에서도 유사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발언 수위와 표현 방식에 따라 통

합 논의의 정치적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함께 참석할 예정이어서, 차기 지방선거를 앞둔 광주시장·전남지사 주요 후보군이 한 공간에 모이게 된다.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를 둘러싼 입장이 공개적으로 교차할 경우, 행정통합 논의는 정책 이슈를 넘어 선거 구도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광주시장 선거에는 재선 도전에 나선 강 시장을 비롯해 민형배·정준호 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으며, 전남지사 선거는 김 지사의 3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신정훈·주철현·이개호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민형배·신정훈·주철현 의원은 행정통합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합 시점은 2030년 전후로 설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유지해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은 “당장 통합을 선언하는 방식은 무리가 있다”며 단계적 접근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반면 강기정·김영록 지사와 정준호·이개호 의원 등은 통합단체장 선출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추진 구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합 논의의 동력을 지방선거와 연결해 실질적인 결단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통합의 큰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시기

와 방식은 지역 합의에 맡기는 메시지를 낼 경우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며 “반대로 조기 통합단체장 선출을 둘러싼 입장 차가 부각되면 논쟁이 선거 국면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와대 오찬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선언 단계를 넘어 입법과 선거 일정이라는 현실 정치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합의가 오아질 경우 특별법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이견이 확인되면 통합 문제 자체가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중국을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화동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 오늘 시진핑과 정상회담…한반도 문제 등 논의

8년 만에 중국 국빈 방문…3박 4일 일정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며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며, 국빈 자격 방문은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이다.

검은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짙은 푸른색 코트 차림의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 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중국 측 환영을 받았다. 공항에는 인허권 중국 과학기술부장관과 다이닝 주한 중

국대사 부부, 노재현 주중대사 등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꽃다발을 든 화동들도 대기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받고 인 부장 및 아이 대사 부부 등과 대화를 나눈 뒤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5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한중 정상 간 회담으로,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대좌 이후 두 달 만이다.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역대 안보 정세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위성래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간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문화·관광 교류의 결실들로 지적돼 온 ‘한한령’ 완화 문제와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위실장은 한한령과 관련해 “문화 교류 공감대를 넓히며 접근하겠다”고 했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상 차원의 논의와 실무 협의가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중일 갈등이나 양안 관계 등 민감한 외교 사안이 언급될지도 주목된다. 이 대

통령은 최근 중국 중앙TV(CCTV)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합의된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중국 측을 향한 외교적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정상회담을 전후해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일정이 빼곡하다.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에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고, 국빈 만찬도 예정돼 있다. 5일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며, 6일에는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 오찬을 함께한다.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천자진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갖고,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한 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는 일정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민주, 공천…’서 계속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부적격 후보자 △악율한 컷오프(공천 배제) △낙하산 공천 △불법 심사를 제로화하는 이른바 ‘4무(無) 원칙’을 내걸었다.

정 대표는 “철저한 검증으로 부적격 후보를 철저히 걸러내고 부적격 후보제로(Zero)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율한 컷오프를 없애고 예비후보자격을 획득한 후보는 모두 경선에 부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낙하산 공천은 없다. 기초·광역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모두 경선이 원칙”이라며 “‘공천신문고’ 제도를 도입해 악율한 심사를 바로 잡고 민주당은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될 경우 징계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고도 했다.

당 지도부는 이와 함께 전라곡원을 최소화하고 ‘공천 신문고 제도’를 도입해 중앙당 차원에서 사·도당 단위의 악율한 컷오프를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말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공천제도를 협의하겠다”며 “중앙당과 시도당이 공천 원칙의 기조를 함께 유지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집중 논의…규모·발표 시점 ‘관심’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이르면 설 전후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증원 규모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조만간 의사인력추계위원회로부터 추계 보고서를 제출받아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장 올해 고3 수험생들의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이르면 설 전후로 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대 관심은 증원 규모로, 앞서 추계위는 2040년 의사 수가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이 부족할 것으로 봤다.

보정심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위원 24명 중 관계부처 공무원 7명이 포함된 정부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가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만5000명으로 추산했던 점,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정부가 예초 500명 증원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증원 규모는 500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 급물살 타나

짧은 준비 기간에 시도민·의회 동의 선결돼야

법적 근거·의견 수렴 등 과제 산적…지방의원 정수도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하면서 향후 추진 일정과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통합 논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큼, 짧은 기간 안에 시도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통합 추진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새해 합동 참배를 한 뒤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선언문에서 “광주·전남 대부분의 새 역사를 열기 위해 양 시·도의 대통합을 곧바로 추진하기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실무 협의를 담당할 ‘광주·전남 통합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 시·도가 동수로 참여하며, 전남 부지사과 광주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4명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시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관련 특별법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소속 다수 의원들이 참여했지만, 광주 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민형배 의원과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신정훈·주철현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시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통합에 찬성할 경우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동선언문에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회의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안을 확정해 조속히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오는 5일 각각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와 전남지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설명회를 열어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시도의회를 대상으로도 별도의 설명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민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방식은 통합추진협의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통합 광역 자치단체의 장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공무원 등 행정 조직은 통합 지자체로 흡수되지만, 지방의회 구성과 의원 정수 문제는 특별법 부칙 등을 통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현재 발의된 법안과는 별도로, 통합에 따른 특례 조항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마한 옹관고분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

전남도, 나주 오랑동 요지·영암 시종고분군 등 4개소

전남도는 나주시, 영암군과 함께 ‘마한 옹관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를 신청했다.

옹관은 큰 항아리 모양의 토기로, 시신을 넣어 땅에 묻는 장례용 관이다.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주로 어민이나 일반인의 무덤에 사용했지만 영산강 유역의 마한 사회에서는 이를 지배층만의 특별한 묘제로 발전시켰다.

마한 옹관고분군은 3~6세기 영산강 유역에서 길이 2m, 무게 300kg에 달하는 거대 옹관을 제작하고, 영산강 물길을 따라 운반해 지배층 무덤에 매장하는 체계를 완성한 유산이다.

생산·유통·매장을 하나로 연결한 이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마한만의 독창적 장례 문화다.

이번에 신청하는 유산은 나주 오랑동 요지, 나주 반남고분군, 나주 북암리고



영암 시종고분군 (내동리쌍무덤)

분군, 영암 시종고분군 등 4개소로 구성된다. 오랑동 요지는 77기의 가마를 갖춘 옹관 생산지며, 반남·북암리·시종고분군은 이 옹관이 실제 매장에 사용된 지배층의 무덤이다.

전남도는 2025년 4월 잠정목록 등재 연구역에 착수해 자료회의와 실무협의를 거쳐 유산명,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구성유산 범위 등을 확정했다. 9월에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더해 12월 17일 최종보고를 완료했다.

박정철 기자 holbul@